



[뉴스] 구속영장 청구에 공정위 고발까지 기업 수난사 언제까지 02



Economy

코스피	2376.24 (-24.80)	코스닥	840.23 (-25.99)
금리 (연이자율)	2.18 (-0.01)	환율 (원/달러)	1104.80 (+7.10) (18일)

서민 발등 짚는 P2P, 2兆 핀테크시장 썩어간다

▲P2P금융 진퇴양난

〈上〉 잇따른 사고

‘2시펀딩’·‘헤라펀딩’ 등 4곳 대표 잠적·먹튀 사건 발생 자금돌려막기 혐의 ‘아나리츠’檢 압수수색·직원 조사 진행



사기와 대표도주 등으로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P2P금융업체. 위에서부터 아나리츠, 더하이원펀딩, 오리펀딩, 헤라펀딩, 2시펀딩 로고 /각사

최근 3년간 급성장하면서 누적 대출 규모만 2조원이 넘는 P2P(peer to peer·개인 간)금융 시장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액 투자자의 돈을 끌어 모았던 P2P 금융 업체의 사기 의혹과 대표이사 도주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P2P금융 업계 전반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업체 ‘아나리츠’ 금융상품에 연체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상환을 앞둔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방법 검찰청은 P2P업체 아나리츠를 압수수색하고 아나리츠 직원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이 P2P금융 대출 규



P2P업체 아나리츠 광고

/아나리츠 홈페이지

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아나리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의 상환일을 미루면서도 모든 의문에 대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아나리츠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책임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사가 책임을 지겠다”며 “앞으로 현상 상황에 대해 상품별 진행 및 변경사항에 대

해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아나리츠는 부동산 PF 대출업체로 자금 돌려막기와 차주가 다른 상품에 투자자 모집을 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자금 돌려막기는 업체 분양상품을 1차, 2차 등으로 늘리면서 1차 상환금(대출금)을 2차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꾸는 형식을 말한다. 대출자가 연체하지 않으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대출자가 한 번 연체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줄줄이 투자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시펀딩’, ‘헤라펀딩’에 이어 ‘더하이원펀딩’과 계열사 ‘오리펀드’의 대표가 상환금을 상환에 앞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만 최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2시펀딩·헤라펀딩·더하이원과 오리펀딩에 이어 아나리츠까지 피해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2시펀딩 대표는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잠적한 상태이며, 헤라펀딩은 지난달 24일 130

억원의 투자금을 미상환한 채 부도났다. 또한 6월 초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잠적했던 오리펀딩 조성환 대표는 최근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2P업체 관계자는 “올해가 P2P금융업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며 “P2P업체 중 신생 이거나 소규모 업체들이 수익률을 높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려 하다 보니 위험성 높은 상품을 계속 제공해 이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잇따른 사고로 P2P금융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업체내부의 자율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금융당국의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돼 P2P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文대통령, 수·보 회의的青직원에 생중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진행 상황 전체를 청와대 전 직원에게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실시간 중계로 국정철학과 대통령 지시사항, 논의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안희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상환의지·계획 확실하면 언제든 대출 받도록 해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채무자 맞춤형 체제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 “공급실적이 아닌 실제 이용자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 지,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상환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경우에 채무금액에 따라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서민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기관들이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해 4대 상품인 미소금융·햇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론·새희망홀씨·바퀴드림론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7.5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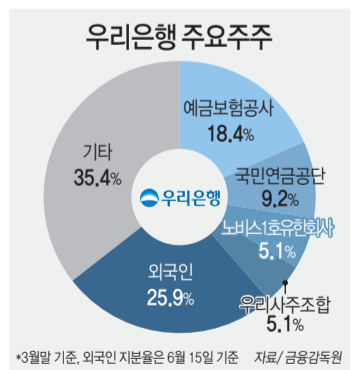
하지만 금융위는 그간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대체로 금리인하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신용등급 7등급→6등급 이하)하는 데에 중점을 뒀 8~9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TF에 ▲감면율 확대, 변제 기간 단축 ▲복잡하고 중복적인 전달체계를 투명성·자율성·효율성 원칙으로 재정비 등을 당부했다.

앞으로 TF는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TF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실시 후 올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우리은행發 M&A 큰장... 오늘 지주전환 신청

빠르면 3분기 중 설립인가 지주사 전환 공식화 이후 특정 증권 인수설 등 술렁



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주사 설립 목표시기는 내년 초다.

지주사 설립에 있어 가장 큰 관문은 금융당국의 인가와 주주 동의 여부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이미 “우리는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아무래도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선 금융위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돼 인가 절차가 단순화되면서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 신청에 대한 인가는 빠르면 3분기 중 나올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는 임시 주주총회다. 우리은행 주가는 1만5000원선에서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한 이후 1만6000원대로 상승세를 탔다.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 전망이 더 밝아졌다는 점에서 매수청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기대한 M&A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지주체제로의 전환이 출자 제한을 극복하고 비은

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지주사의 출자역력은 8조7000억원이다. 우리은행의 현재 출자역력 7000억원 안팎에서 10배 이상 증자한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라는 출자 한도가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이중 레버리지 비율(double leverage)이란 간접 규제만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M&A 우선순위로 꼽히는 업권은 증권과 자산운용, 부동산 신탁 등이다.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인수 부담이 높지 않으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은 높은 분야다.

이미 교보증권과 우리은행 인수설이 돌기도 했지만 증권사보다 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을 먼저 인수해 자산관리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